

종합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통합” 재확인

국토부, 중장기 계획 통보... 다음달 말 최종 확정

“서남권 국제공항 개발” 기존 방침에 광주시 반발

국토해양부가 광주공항의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해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무안공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실질적인 서남권 국제공항에 걸맞는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립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안)’(광주일보 10월 12일자 1·3면)을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6일까지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목표·영양·무안·신안 등의 의견을 수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은 국내의 항공운송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공항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공항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종합계획안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주·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관련, 광주공항의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한 뒤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종합계획안은 무안공항의 경우 광주공항과 통합되면서 오는 2030년 158만6000명(국내 144만8000명·국제 13만8000명)의 여객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화물수요도 2010년(1만3254t)보다 5977t늘어

난 1만9231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종합계획안은 또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여객수요가 47~64%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남권 공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 대응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아울러 흑산도 소형공항 개발과 고흥의 다목적 경비행장(Air-Park) 건설, 영산호 수상비행장 계획도 내놓았다. 흑산도와 흑도를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이 34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고 무안공항 및 수도권, 동남아 노선과 연결하면 오는 2017년 87만명(수도권 72만명·서남권 13만명), 2035년 90만명의 항공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고흥에 다목적 경비행장을 건설,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영산호에 관광·체험 및 항공레포츠 기능을 담당할 수상비행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종합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같은 종합계획안이 기존 방침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무안공항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안공항의 국내선 이전 및 단거리 동남아 노선 중심의 국제선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인 장거리 국제선 노선 확보, 지역 관광·산업단지와의 연계 공항개발·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는 “연간 이용자가 138만명의 광주 공항이 이용자 2만명에 불과한 무안공항으로 흡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역 경쟁력을 위해 광주공항 존치·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할 태세다.”

/김지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설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고리 끊을 때 됐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또 논란이다. 5기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만에 의회거리 마치 경쟁하듯 외유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연수에 대한 국민적 지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이들의 배짱에 그제 놀라울 따름이다. 이쯤 되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고질병으로 굳어진 듯하다.

광주 남구의회는 오는 7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연수를 다녀 온다고 한다. 전남도의회 의원 13명은 지난달 28일부터 8박10일 간 미국을 방문하고 오는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말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이지 거의 관광성 외유다. 여행사의 상품에 맞춰진 일정에 걸어야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특히 개원 1년 달이면 지역 현안 파악

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다. 더욱이 연말까지는 행정사무 감사와 지자체 지 1년 달 만에 의회거리 마치 경쟁하듯 외유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연수에 대한 국민적 지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이들의 배짱에 그제 놀라울 따름이다. 이쯤 되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고질병으로 굳어진 듯하다.

이제 반드시 끝내야 한다. 지방의회에 맡겨진 고질화된 ‘해외연수병(痼)’을 고칠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비 항목을 아예 없애는 등 제도적 차단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현재 낭비를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외유를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는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소환 등을 통해 지방정치 무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관광성 외유’를 막을 듣기도 지겹다.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사고 방치만 할 건가

광주시내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관내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는 2008년 446건, 2009년 501건, 올 연말까지 500여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승강기 사고는 아파트와 상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승강기의 문이 잠겨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북구 운암동 A모텔에서는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이 40여분 공포에 떨었고, 앞서 25일에는 북구 오치동 모 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주민 4명이 갇혀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고 한다.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거나 승강기 문이 열려도 승객이 갇혀 있을 경우 이용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사고를 당한 경험자들은 공포감에 사로 잡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최근에는 아파트나 빌딩이 점차 고층화되고 노후화된 건물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도 그만큼 높다.

승강기 사고는 관리 부실로 인한 기계 오작동과 탑승자의 안전 부주의가 가장 큰 요인이다.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정전이 되면 기계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자가발전 시설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도.

또 탑승자가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몸을 기대는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해 승강기가 멈춰서기도 한다. 따라서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강기에 갇히더라도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건물주나 점검기관은 승강기의 상태 및 관리가 사고 예방의 접점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로비 통했나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상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본회의에서 가결, 로비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9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청목회는 강기정의

청원경찰법 개정안

상정 3개월만에

초고속 통과 의혹

원을 통해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 전 대표 측에 수백만원을 전달하려 하는 등 ‘후원금 로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자 행안위는 물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 공세를 펼치는가 하며 의원 홈페이지에 수백개의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로비와 압박에 나섰다.

청목회의 로비 영향인지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그해 11월5일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행안위 상정 3개월만인 12월29일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의 가결까지 3개월이면 법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된 사례”라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로비의혹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방위 후원금 수사 여의도 ‘패닉’

청목회 이어 농협법·카드사 노조 등

입법 로비 대상 거론... 정치권 술렁

청목회(청원경찰법특별회의)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청목회와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어 정무위와 농수산식품위 등도 유사한 입법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여야는 검찰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검찰이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에 나서며 따라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들도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

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식품위 전남지역 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농협 직원들이 10만원 단위의 소액 후원금을 2000만원 이상 보내왔다”며 “전국의 농협 조직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후원금을 모두 문제 삼는다면 국회 모 든 상임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현행 후원금 제도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후원금 수사가 스폰서 검사 및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부실수사 논란을 덮고 야당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피곤하다

자동차용 배터리 광주 공장 준공

아이큐파워아시아, 평동외국인투자지역에... 年 150만개 생산

지능형 전자 배터리 제조기업인 아이큐파워아시아(주)(대표 이태수)가 5일 광주시 평동외국인투자지역에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독일 아이큐파워아게(iQ Power AG)의 설립자 사장, 대우인태내셔널 이태수 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축사에서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며 그린에너지산업의 핵심인 축전지 분야의 유망기업이 광주지역에 들어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전지산업과 전기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3만6322㎡ 부지에 연구동(1533㎡)과 생산동(1만4393㎡)을 갖춘 아이큐파워아시아(주)는 독일

의 아이큐파워아게(32%)와 한국의 대우인태내셔널(20%), 케이지파워(48%)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축전지 분야 유망기업으로 전자배터리와 에너지 컨트롤러 등을 생산한다.

광주공장은 연간 150만개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1기의 생산라인을 갖췄으며 오는 2015년까지 총 6개 생산라인을 구축해 연간 1000만개(약 4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아이큐파워아시아(주)는 지난 2005년 5월 광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광주공장 건립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생산이 본격화되면 직접 고용 350명, 포함해 모두 1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미, 8~9일 FTA 최종 담판

이틀간 서울서 통상장관회의

외교통상부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8~9일 이틀간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FTA 쟁점현안 타결 시한인 오는 11월 한미정상회담을 2-3일 앞두고 열리는 점에서 한미 FTA 쟁점현안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짓는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참전 용사 명예수당 월 9만→15만원 인상

정부·한나라당

정부가 한나라당은 5일 6·25전쟁 등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행 월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허태열 국회 정부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정부위원, 김양 보훈처장 등 보훈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참전 유공자에 대

한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6·25전쟁 참전용사는 16만2000여명이고, 월별전 참전용사는 7만1000여명이다. 참전수당을 월 6만원 가량 인상할 경우 1068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당정은 다음 주 정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인상액을 결정할 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